

# POLITICS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 尹 탄핵 선고 20일이나 21일이나...여론전 확산

### 도,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 내달 20일까지 자살예방 홍보

전남도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고위험시기(3~5월)를 맞아 자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일환으로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봄철 자살률이 급증하는 현상을 '스프링 피크(Spring Peak)'라고 하는데, 전남도가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자살자 수 분석 결과 4월이 24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자살예방 집중관리를 위해 22개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소방·경찰, 자살 고위험 수단 관리기관 600개소에 '위기대응 사회서비스 안내', '자살시도자 지원사업 안내', '생명사랑 로고송 및 영상' 등 홍보물 17종을 배포하며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봄철 신체활동을 독려하고 도민의 생명사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는 이벤트 기간(17일~4월 20일)까지 1만보 걷기, 1만보 걸음 증빙 사진 촬영, 네이버폼(QR)으로 증빙사진 업로드 및 설문을 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무작위로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건강하게 봄 나기 생명사랑 만보 걷기 이벤트' 참여방법은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061mi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자살예방 집중관리 시기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 및 선제적 발굴을 통해 우울과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이벤트에 많은 도민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현구 기자 gnnews1@gwangnam.co.kr

### 광주시, 동물 공존환경 조성 길고양이 2526마리 중성화

광주시는 길고양이 증가로 발생하는 소음 등 시민 생활민원 예방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실시한다.

중성화 대상은 2kg 이상인 길고양이며, 시술을 받은 길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1cm 자른 뒤 방사선 항후 중성화된 고양이 이물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길고양이의 개체 수 증가를 억제하면서 번식기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배설물, 쓰레기분투 훼손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완화한다. 길고양이에 대한 혐오정서가 동물학대를 일으킬 수 있어 길고양이와 사람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광주시는 매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구집별 중성화사업'과 '주택가 중성화사업'으로 나눠 2526마리에 대해 시행한다.

'구집별 중성화사업'은 지난 2월 공개 모집을 통해 포획·방사 단계와 중성화 수술 병원 5개소를 선정했다. 사업은 이달부터 시작해 사업량 소진 때까지이며 재개발지역 등 거점지역의 길고양이 900마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

5개 자치구에서 길고양이 불편민원 해결을 위해 1626마리에 대한 중성화 사업을 시행한다. 길고양이 중성화 희망자는 1월부터 접수 순으로 받아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 사업량 소진 때까지 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불편한 점이 있는 시민은 자치구에 접수한 후 중성화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 신청 및 문의는 동구청 도시농업팀, 서구청 동물정책팀, 남구청 동물축산팀, 북구청 동물정책팀, 광산구청 반려동물정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현재 기일 지정 무소식에 해석 분분 야 "더 이상 지연은 비정상·무책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 관련기사 5면

현재의 결론이 오는 20일이나 21일 날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진영 간 대립 양상이 심화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만큼 현재가 이를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이상의 지연은 비정상이고 무책임"이라며 "현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이고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오늘 중선 고기일을 지정할 것을 (현재에)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미국이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을 고리로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 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 수괴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다"며 "윤석열 파면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풍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사실상 이번 주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의 마지막 선로로 보는 분위기다.

이런 입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와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선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먼저 받게 되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압박하는 극우 세력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이는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용우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탄핵 사유에 큰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며 "국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결론에 이르는 사실 관계 정리를 꼼꼼하게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앞 단식 농성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소속 의원들이 도보 행진을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하는 시민단체 모임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현재에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도 할 계획이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도 소속의원이 단식 중인 광화문 광장 현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현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한다. 한편 현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윤 대통령의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이날까지 93일째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후 91일 만에 결론이 난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기간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재는 이번 사건처럼 정기 선고일이

이번 별도의 특별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경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알려왔는데,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고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각종 중각해석만 부분만 상황이다. 이번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18일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20일이나, 21일 사건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서왕진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지정, 윤 정부 외교 참사"

### "두 달간 인지조차 못해...한미동맹 침담한 현주소"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사진)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로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된 데 대해 "대한민국이 두 달간 인지조차 못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외교 참사이자 한미동맹의 침담한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서왕진 의원은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되면 에너지부와 산하 17개 국립연구소 등에 방문하기 위해 6주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정보나 연구 접근에 큰 제약이 따른다"며 이번 지정이 한국의 첨단기술 발전과 연구 협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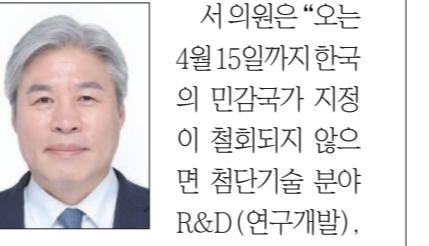
서 의원은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안보 포퓰리즘을 지목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 가능성

을 언급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였기 때문"이라며, 그 근거로 파이로프로세스 재처리와 고속로 추진, 핵잠수함 등을 사례로 언급했다.

또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등 국민 외교 참사이자 한미동맹의 침담한 현주소"를 제기하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합작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이 안보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나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며 "12월 3일 당시 필립 콜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긴급 연락을 시도했지만, 조 장관은 전화조차 받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에너지 협력 분야 등에서 한미 협력 기조가 흔들려 추가적인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청구서가 계속 날아올 것이고 앞으로도 국민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번 민감국가 지정 논란은 내란 전후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인해 국내 경제 폭망은 물론,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쌓아온 신뢰마저 총체적으로 무너졌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 선고만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격을 지키는 길"이라며 "현재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신속한 파면을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5분이면 OK"...광주시청사 출입절차 간소화

### 방문객 출입관리 시스템...사전 방문, 문자서비스로 출입

광주시가 '열린청사' 취지에 맞춰 방문객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청사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의 '공공용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Software as a Service·서버 구축 없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 통해 제공) 이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행안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행정·공공기관이 업무처리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구매했던 것과 달리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사업에서 청사 방문객을 관리하는 '방문객 출입관리 서비스 이용지원 기관'으로 선정돼 시스템 구축비와 연간 이용료를 포함해 최대 280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광주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개방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4월 중 '방문객 출입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출입 절차는 3단계로 이뤄진다. 담당공무원이 방문예정자 정보(방문자·연락처·방문일자 등)를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면 방문예정자에게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사전 방문 안내메시지가 전송된다. 방문객은 청사 안내데스크에 해당 안내

메시지를 보여준 후 출입카드를 발급받아 청사에 출입하면 된다.

또 담당공무원이 방문객 차량정보를 일일이 주차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도, 방문객이 사전 방문 안내메시지와 연계된 청사 주차시스템에 직접 차량 정보를 입력하면 무료주차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담당공무원이 방문예정자의 인적사항과 방문 목적 등을 수기로 결재 받은 뒤 시청 1층 안내데스크에 정보를 공유하고, 안내데스크 직원이 담당공무원에게 전화로 확인해야 출입이 가능하고 주차시스템도 담당공무원이 등록 관리해야 했다.

시스템 도입으로 기존 30분가량 소요되던 방문객 출입절차가 5분 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당공무원도 업무가 효율화됨에 따라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여야 "윤 대통령 탄핵 선고에 승복" 서로 압박 국힘 "민주당 승복할지 의문"...민주 "언행일치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는 17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승복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회를 선동하고 현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현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를 향해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승동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각급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8전 8배' 탄핵 선고 결과에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장사가 이루어지지 위해 피청구인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탄핵 각하 또는 기각을 요구하며 현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것은 '승복'과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그동안 현재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과 겁박 행위에 대해 우선 사과하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마은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현재 결정 승복이 진심이라면, 괜히 민주당에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현재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정치권의 승복 약속 요구가 있다. 당연하다"며 "국민의 갈등, 현재에 대한 압박과 폭력을 막아야 한다"며 "현재 선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15일 자신의 누리집에 "승복은 가해자인 윤석열만 하면 된다"며 "피해자인 야당과 국민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글을 올렸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